

감사원 징계요구에도 행정소송 제기

민주 윤준병 의원, '일하는 공직사회 만들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 31일, 의정활동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공직사회 만들기'를 위한 첫 번째 법안으로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징계요구, 문책요구만으로도 승진과 상훈에서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감사원은 징계요구 등의 이러한 성격



을 이용해 징계요구 등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감사원의 징계요구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구제 방법 등을 제약해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축되고 복지부동

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적극 행정(일하는 공직사회)을 강조하고 있으나 공직사회 현장에서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자제로 열심히 처리하고 내면 포상 대신 감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는 자조가 팽배한 현실이다"며 "따라서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감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파면요구를 제외한 징계요구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 징계요구, 징계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간처분'에 불과하다고 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선 행정 현장에서는 징계요구와 문책요구 민으로 승진과 상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공무원행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유호상 기자

"진료 거부 대단히 유감 의사가 가장 필요한 때"

문 대통령 "히포크라테스 선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발이 끝내 부결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전공의 협의회(대전협)을 향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응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전협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 병원장 등과의 협의를 마친 뒤에도 집단 휴진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전협은 한정에 위원장 면담 당시 4대 의료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사립대 병원장 및 의대 학장 등으로 구성된 '의학 교육 및 수련 병원 협의체' 등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대전협 내부 강경파에서는 4대 의료 정책 '원점 재검토' 등의 표현을 통해 확실히 약속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나아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응 전공의들을 집단 고발하는 등 강경 노선을 거두지 않으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를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며 "그 결과와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때에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이해하기 어렵다.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했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거듭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운데)가 지난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 새 지도부 "코로나 국난극복 총력전"

이낙연 당대표 "국난극복위 확대 재편... 당 총력체제"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 의료계 단호히 대응할 것 촉구"
신동근 최고위원 "의료인 출신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지난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극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당정청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 정책에 반발해 집단 진료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포함한 의료계를 향해선 조속한 파업 중단과 복귀를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수락연설에서 밝힌 국민의 5대 명령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난극복이다. 소속 의원들께도 긴장감을 가지고 국난극복 대열에 동참해주시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위원장을 제가 맡기로 결정했다"며 "공동위원장으로 역할 있는 중진급 의원들이 동참해서 당을 총력체제로 (재

편해) 국난극복에 나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새 지도부는 워룸(WarRoom) 상황실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당면한 코로나19 방역 승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당정청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 위기 시대에 당정청이 중심을 잡고 방역과 경제 전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정부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며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하루 속히 복귀해달라. 의료계의 현명한 행동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 정치적인 찬반과 선호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

민주 전북도당 대변인단 개편 구성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변인단을 개편했다. 지난 31일 전북도당에 따르면 김성주 도당 위원장 부인 이후 첫 번째 도당 조직개편을 대변인단으로 하고 수석대변인 1명과 여성대변인, 청년대변인으로 구성했다.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대변인단으로는 수석대변인에 이명연 전북도위원을 청년대변인에 오임선 익산시의원, 여성대변인에 이미선 남원시의원을 임명했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새롭게 임명된 대변인단은 현역 지방의원들로서 민주당의 각종 정책에 대한 식견이 높고 지난 총선에서 정책 공약들이 만들어 지는데 큰 기여를 했던 경험이 있어 전북도당에서 수행되는 각종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당원과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靑, 신임 비서관 발표... 정무 배재정 등 6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여원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후임으로 윤재관 현 부대변인을 승진 발탁했다. 신임 정무비서관에는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고, 청년비서관에는 김광진 현 정무비서관을 수평 이동시켰다. 신임 기후환경비서관에는 박진석 서울에너지공사 초대 사장을 내정했다.

또 신임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장용석 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내정하고, 현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을 공석으로 남아 있는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이동 배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러한 내용을 팔자로 하는 총 6명 규모의 신임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뉴시스

이탄희 의원, 사법개혁 행보 '본격화'

투명해져 재판변호사 등이 법정 외의 변론을 시도할 동기가 줄어들고 법관의 부작정할 언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관철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도 개정한다.

일단 국민들은 판결문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반면, 재판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판사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까지 확인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거지 않는 재판예우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형사사법절차 특유의 불투명함 때문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절차에 불투명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예우 근절 3법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법조계의 고질병인 재판예우의 토대를 허물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방역지침 위반 장소·시설 운영중단·폐쇄 조치 근거 마련

민주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지난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단위 방역역량을 제고하

고 조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대규모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속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전작권 전환 등 추진 최선"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전작권전환통제권 전환 등 주요 국방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지난 31일 오전 "중차대한 시기에 합참의장에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장관님의 지휘 의도를 받들어 육·해·공군·해병대의 합동성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또 "국방개혁 2.0과 전작권전환통제권 전환 등 주요 국방 과제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다음달 1일 국무회의 의결 후 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정식 임명된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